

## 과로死회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80.5시간, 69시간, 64시간, 60시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공개되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얼마인가를 두고 쟁점이 난무한다. 공통점은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장시간노동’ 기준으로 보는 주 48시간보다도 턱없이 길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했다는데, 정작 우리 사회는 ‘주 69시간’, ‘주 80.5’시간으로 들끓고 있다. 이유가 뭘까.

### 연장근로 한도 없애는 ‘총량관리제’

고용노동부가 3월 6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1주 최대 12시간까지 정해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없애고 노사합의로 월·분기·반기·연간 총량을 분배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 일이 몰릴 때 연장근로시간을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주 12시간’이라는 한도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한도’ 없는 장시간 노동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분기 이상)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단위별 연장근로 총량은 90%(분기), 80%(반기), 70%(1년)로 관리단위로 비례 감축해 ▲1개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을 쓸 수 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과 법정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하루 24시간 중 11.5시간 일할 수 있는데 주휴일 1일을 제외한 1주(6일) 동안 ‘69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29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유급인 주휴일에도 수당만 주면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 주휴

일도 일을 한다고 가정하면 ‘11.5시간×7일=80.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 일방통행, 결국 역주행으로 이어져 부정 여론 확산, 대통령 지지율 ‘추락’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제주도 ‘한 달 살기’나 안식월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아니 들끓었다. “지금 있는 연차휴가도 못 쓰는데 한 달 제주 살기가 가능하겠나”는 냉소부터 “죽도록 일하다가, 휴가 전에 결국 죽는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왔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30%대로 주저앉았다.

결국 입법예고 8일 뒤인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 대표도 “고용노동부가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며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사실 이런 혼선은 정부가 자초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지난해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당시에 이해당사자인 노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사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공들여 논의했기에 현실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논의 과정을 생략한 것이 ‘주 69시간제 혼선’의 가장 큰 이유다.

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 한도를 없애고 ‘총량관리’로 개편하려면 먼저 해결할 과제가 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과로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짜야근’을 어떻게 차단하고 제대로 보상할 것인가란 질문에 먼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유일한 건강권 보호조치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현장(기업)에서 11시간 연속휴식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다. 대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라는 캡(상한)을 씌웠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니 아마도 또 하나의 ‘캡’을 씌운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정작 이를 만드는 고용노동부조차 왜 ‘60시간’이 기준인지는 모를 것 같다. 다만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대통령이 이제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인식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정책이 가진 무게는 이토록 가볍다. 🍷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노사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지만 공들여 논의했기에 현실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논의 과정을 생략한 것이 ‘주 69시간제 혼선’의 가장 큰 이유다.

